



통신재벌, 지상파 UHD를 난도질하다 지상파 UHD 표준안 부결...지상파 ‘반발’

지상파 UHD가 정면으로 부정당했다. 방송 산업발전 종합계획을 기점으로 고품질 미디어 플랫폼의 가치를 저버리고 유료방송 중심의 산업적 낙수효과만 노리는 정부의 방침과, ICT 표준을 정하는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핵심 구성원인 거대 통신재벌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들어맞은 결과다.

7월 2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TTA 회의실에서 열린 총회에서 지상파 UHD 송수신종합표준(안), 통칭 표준안이 끝내 부결됐다. 충격적인 결과다. ICT 표준을 정하는 TTA 운영 위원회도 아닌 총회에서, 특정 표준안이 부결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일 올라온 34개 표준 후보안 중 유일하게 지상파 UHD 표준안만 부결되는 진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총회가 지상파 UHD 표준안을 부결시킨 이

유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불안정성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주파수의 상하위 40MHz 폭 통신 할당을 근간으로 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그대로 따르면서, 지상파 UHD를 위한 주파수가 구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가 재난망이 700MHz 대역 주파수에 할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ATSC 3.0과 DVB-T2 등 전송방식의 미비도 부결의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러나 TTA 총회에서 지상파 UHD 표준안을 부결을 주도한 것이 ‘통신사’라는 점이 문제다. TTA 총회의 의결권은 회비에 비례해 투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통신사들이 과반수에 가까운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TTA 구성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ICT 표준을 정하는 TTA의 구성원 절대 다수가 통신사로 구성되었기에, 무료 보편의 고품질 미디어 플랫폼의 영역에서도 영뚱한 통신사들이 생명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사들은 IPTV라는 방송의 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런 통신사들이 경쟁 상대인 지상파의 UHD 표준안을 TTA 총회에서 부결시키는 것은 도의적인 문제를 넘어 제도적 허점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TTA에 구축된 통신 카르텔을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타파해 TTA 해체 수준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방송 관련 표준의 TTA 표준안 제정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지상파를 제외한 모든 유료방송은 위성방송을 끝으로 UHD 표준안이 마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석연치 않은 TTA 내부의 통신사 ‘세력’이 지상파 UHD 표준안을 총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엄청난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의 경우 작년 12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상파 UHD 표준안이 기술 보고서로 하향 채택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는 한, 지상파 UHD를 비롯한 대한민국 미디어 플랫폼 발전은 요원하다는 것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쏠리고 있다.

한편 TTA 총회에서 지상파 UHD 표준안이 누락된 것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방송과 통신은 700MHz 대역 주파수를 두고 국가 재난망 구축이라는 변수와 더불어 맹렬하게 싸우고 있다. 하지만 해당 주파수 글로벌 통신 활용설의 허구가 알려지고, 통신사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 및 모바일 IPTV 사업 확충이 역으로 통신사의 주파수 수급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주파수의 할당은 공익적 요소로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는 중이다.(3면에 계속)

최진홍 rgdsz2@kobeta.com

KBS 사장 선임, 포화 속으로 조대현, 홍성규 유력...노조 “거부한다”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를 6명으로 압축했다. 6월 30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총 30여명의 인사가 몰린 가운데 7월 2일 KBS 이사회는 11명의 이사가 3표씩 행사해 6명의 후보군을 선발한 것이다. 조대현 전 KBS미디어 사장이 7표, 홍성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6표, 고대영 전 KBS 보도본부장과 이동식 전 KBS미디어 대표, 이상요 KBS PD가 4표, 류현순 부사장이 3표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날 9일 KBS 이사회는 후보로 오전 6명 중 최종 1인을 선발하게 된다.

“KBS 사장 공모는 국민을 모독하는 ‘제2의 김환영 선출쇼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현 상황에서는 KBS 이사회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조대현 전 사장과 홍성규 전 방송위 상임위원이 차기 사장에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전 사장은 ‘KBS의 관제보도화를 유발한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홍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방송장악의 최전선에 섰던 부역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에, 이들이 차기 사장에 선출된다고 해도 상당한 내용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엄청난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KBS 양대 노동조합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부적격 사장 후보로 지목된 인사가 다수 포함된 KBS 이사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KBS 노동조합은 “시정잡배 수준의 이사회가 9일 사장 후보에 대한 면접과 최종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사회는 지금이라도 밀실·야합·보은·정파 투표를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사장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본부 또한 “KBS 본부가 부적격자로 뽑은 자를 4명이나 최종심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사회 스스로 청와대의 꼭두각시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다면 양대 노조는 총파업 재개를 선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부에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언론계 혁신민연대는 즉각 논평을 내고 KBS 이사회의 결정을 비판하는 한편, 스스로 정권의 주구가 되기로 결정한 이사회의 해체까지 주장했다. 이들은 “KBS 이사회가 국민을 상대로 쇼를 하고 있다”며 “KBS 이사들은 회의를 열자마자 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서류심사는 초등생 숙제하듯 각자 집에서 해왔다. 대체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심사했는지 서로 ‘몰지도 따지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한편 7월 3일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BS 이사회가 최종 후보 1인을 정하기 전, 노동조합과 토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물론 김 상임위원이 본인의 발언은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새로운 사장 선임을 두고 과정과 결과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치열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KBS 양대 노동조합이 사장 선임 절차를 두고 파업 재개라는 초강수를 염두에 두는 상황에서, 김 상임위원의 발언은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최진홍 rgdsz2@kobeta.com

Photo News



‘지상파 UHD를 포기할 수 없다’

7월 8일 한국방송협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지상파 UHD 표준안 부결과 관련된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방송협회 제공]



[성명서]

국민을 위한 지상파 UHD 정책을 촉구한다

7월 2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는 지상파 UHD TV 송수신종합표준화 안건을 부결시켰다. ICT 표준을 제정하며 대한민국 발전에 힘을 보태야 하는 TTA가 국민의 무료 보편적 UHD 시청권을 박탈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이번 TTA의 지상파 UHD 표준안 부결은 KT, SKT, LG유플러스로 대표되는 거대 통신재벌의 탐욕과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영리를 위해서 대한민국 지상파의 미래를 무참히 짓밟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ICT 발전과 공공의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는 파렴치한 집단이다. 현재 통신재벌들은 지상파 UHD에 반드시 필요한 700MHz 대역 주파수를 자신들의 가입자를 늘리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소모하고자 막대한 로비를 펼치고 있으며, 이 와중에 지상파 UHD 표준안을 부결시켜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노린 꾀수를 부린 것이다.

7월 8일 한국방송협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TTA의 지상파 표준안 부결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방송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상파 UHD 국가 표준을 조속히 결정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통신재벌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TTA를 개혁하라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고 싶어하는 탐욕스러운 통신재벌이 장악한 TTA에서 지상파 UHD 표준안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길 바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UHD로 대표되는 최고의 시청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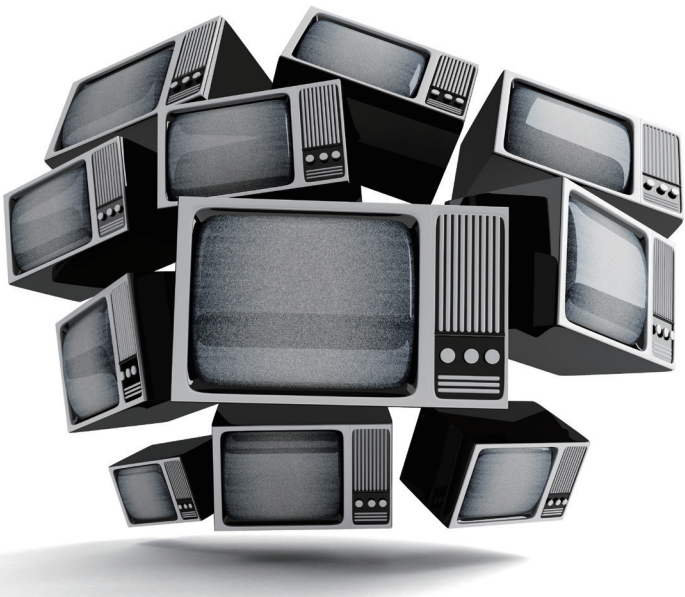
벌의 추악한 탐욕과 단절된 새로운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지상파 UHD는 모든 국민에게 발전된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공공적이며, 가장 공익적인 미디어 플랫폼의 가치다. 게다가 세계 방송기술의 거대한 흐름도 UHD로 수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재벌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및 모바일 IPTV 사업 확충으로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평평 낭비하는 한편, 이를 만회하고자 700MHz 대역 주파수에 마수를 뻗으며 거수기로 전락한 TTA를 통해 지상파 UHD 표준안을 부결시켰다.

정부는 당장 지상파 UHD 표준안을 확정하라. 그리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착수하는 한편, 해체에 가까운 TTA의 개혁을 통해 통신재벌의 탐욕스러운 헛바닥이 미디어 플랫폼의 ‘공공성’을 유린하는 것을 막아라.

UHD는 온전히 국민의 것이다.

2014년 7월 8일 방송인총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PD연합회 · 방송기자연합회 ·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 한국아나운서연합회 ·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사설

통신재벌의 주구, TTA를 거부한다

충격적인 결과

7월 2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지상파 UHD 송수신표준 정합(안)을 부결시켰다. 총회에 올라온 34건의 안건 중 지상파 UHD 표준만 부결되었다. TTA의 절대다수인 통신사들이 지상파 UHD의 발전 가능성을 미연에 잘라버린 이 충격적인 사건은, 훗날 무료 보편적 뉴미디어 플랫폼 발전의 암울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TTA는 자격이 있는가?

TTA는 ICT 표준을 정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민간단체다. 그리고 이들은 협회비 납부를 기준으로 구성원의 ‘숫자’, 즉 ‘표’를 정한다. 당연히 ‘재벌’인 통신사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며, 지상파 방송 4개사는 모두 합쳐 5표만 확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TTA가 통신이 아닌 방송의 표준안을 제정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많다. 통신사들은 IPTV라는 어엿한 미디어 플랫폼을 보유하고, 심지어 KT는 위성방송까지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통신사들은 현재 지상파 UHD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두고 방송과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이런 통신사들이 미디어 플랫폼 경쟁자인 지상파에게 우호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순진했던 것이다.

방송 표준,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

더 이상 TTA가 주도하는 방송 표준이 합리적이고 공리적인 판단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통신사, 아니 통신재벌들은 공공의 재산인 주파수를 탐욕스럽게 먹어치우며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움직이는 ‘괴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공공의 인프라가 가지는 중요한 가치를 백날 설명해봤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 표준은 TTA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방송 전문가들이 모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표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한다

지상파는 현재 700M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브라질 월드컵 UHD 실험 방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는 중이고 상용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TTA의 ‘똥니’로 인해 이제 시청자들은 무료 보편적 뉴미디어 플랫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원한 박탈은 곤란하다. 시청자들이 당연한 UHD 권리를 부여받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이제 방송 표준을 정하는 새로운 조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유료방송 통합법’ 뜨거운 감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반영한 이른바 유료방송 통합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방송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유료방송 통합법이 올 하반기 방송계를 다시 한 번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6월 25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유료방송 법제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강명현 한림대 교수는 “동일 시장에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케이블과 IPTV에 비대칭 규제가 가해졌는데 규제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 규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동시에 IPTV 업계의 직접사용채널(이하 직사채널) 요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규제의 균형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유료 방송 업계의 규제를 무조건 없애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강교수는 2001년 위성방송 도입, 2008년 IPTV 서비스 시작 이후 유료방송 업계는 IPTV의 약진, 케이블 플랫폼의 약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유료방송 플랫폼 간의 지형 변화를 고려해 다양한 비대칭 규제의 존속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케이블과 IPTV의 현실적인 시장 지배력의 역학관계가 변화한 만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균형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광폭의 규제 완화가 예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강 교수 역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운운하며 점유율 합산과 직사채널의 허용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통신 사업자의 여론 독과점 우려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그 사이 종편과 보도채널이 등장함에 따

라 특정 채널에 의한 여론의 지배력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우려가 있으나 보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사 보도의 폐해가 나타날 경우 사후규제를 통해 관리하면 된다”며 IPTV의 직사채널 도입을 긍정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씩 하나씩 규제를 완화한다면 결국 방송 시장은 무규제로 정리되며 정글의 법칙만이 난무하는 시장으로 변모할 것이다.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시장은 물론이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석현 법무법인 KCL 변호사 역시 이 부분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유료방송 통합법을 둘러싼 모든 논의가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방송법 자체가 시청자의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만큼 시청자 중심에서 시청자의 시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으며 방송의 큰 틀 안에서 각 매체별 특성에 맞게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만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역시 이 변호사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모든 논의는 시청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토론회장에서 영국의 스콧 와이트먼 주한 대사는 “좋은 규제는 창조경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매체별 다양성을 고려해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각 매체별 역할과 특성에 따른 규제를 적용해야 방송 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창조경제 실현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가 정책 수립에 있어 사업자 중심이 아닌 시청자 중심의 법제화를 이뤄갈지 ‘유료방송 통합법’에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미래창조과학부가 위성방송의 UHD 기술 기준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기술 기준에는 영상 압축 방식에 신규 압축 기술(HEVC)을 추가하고 다중화·변조 등 기술적인 상세조건을 위성방송이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관련 설비가 신규 위성방송용 주파수(20~21GHz) 대역까지 지원하도록 주파수 범위를 확장했다. 지상파 UHD의 표준안 제정 실패와 묘한 대비를 이룬다.

위성 UHD 방송의 경우 2012년 10월부터 천리안 위성을 이용한 실험 방송을 진행했으며, 이달부터 KT스카이라이프가 상용위성인 무궁화위성을 통한 전국 UHD 방송 채널 SKYUHD를 개국해 실험 방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이날이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6월 2일 목동 KT채임버홀에서 열린 ‘SKYUHD 개국 기념식’에서 전국 UHD 채널 론칭을 선포하고 오는

12월 셋톱박스를 출시해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KT스카이라이프는 2015년까지 총 3개의 UHD 채널을 선보여 ‘다채널 UHD 서비스’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KT스카이라이프는 총 102억 원을 투자해 UHD 스튜디오, 편집 시설, 제작 전문 인력 육성은 물론 UHD 콘텐츠즈 부분에 투자한다.

이로써 위성방송 UHD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기술 기준까지 제정된 이상 막대한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하는 위성 UHD의 가능성이 더욱 각광을 받는 분위기다.

다만 IPTV에 밀려 형제와의 소모전을 벌이는 KT스카이라이프의 특성상, 위성 UHD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점유율 합산 규제를 포함한 법적 문제를 비롯해 넘어야 할 산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일본이 위성방송 UHD에 방점을 찍었던 근거를 바탕으로 KT

스카이라이프의 UHD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회에서 추진되는 KT 미디어 플랫폼 견제에 통한 방송법이라는 굴곡을 거치며 KT에게 일정 정도 유리하게 진행되고, 만약 IPTV가 직접사용채널이라는 선물까지 받아 광역화 노선을 추진하는 케이블과 정면 승부를 벌인다면, SOD 활성화와 DCS 허용을 전제로 KT스카이라이프의 ‘틈새 공략’은 상당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기술 기준 제정에 이어 연내 위성방송용 셋톱박스가 출시되면 전국에서 위성을 통한 UHD 방송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무로보편적 뉴미디어 플랫폼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의 UHD 생태계 조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강민정 mjjang@kobeta.com

PP 발전 전략, 시작부터 난항

유료방송 이용 요금 승인 기준 개선 및 결합상품 적정할인을 방안 제고 프로그램 자체 제작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및 세제감면 방안, 광고 규제 정비 등을 통해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방송협회(이하 방송협회)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영세한 PP 사업자들을 명분으로 내세워 CJ 같은 대기업과 종합편성채널에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방송협회는 PP 발전 전략이 발표되자마자 성명서를 발표해 “세제지원 혜택은 결국 전체 PP 자체 제작비 중 각각 50%와 15%를 차지하고 있는 CJ와 종편 PP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난해 방송 사업 매출이 지상파에 육박하는 대기업 계열사인 CJ E&M과 방송발전기금을 면제받고 의무재송신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종편 PP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방송협회의 지적처럼 대기업과 종편에 대한 세제감면, 광고 규제 철폐 등으로 생길 부작용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영세한 중소 개별 PP 사업자를 위한 지원이라는 명분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세제감면 적용에 제한을 두어 CJ와 같은 대기업이나 종편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미래부가 PP 발전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P 발전 전략의 두 번째 줄기인 유료방송 시장의 관리 감독 강화는 업계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의 왜곡된 시장 구조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서 일정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PP 발전 전략을 보면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가칭)’가 하는 일이 많다. PP 콘텐츠 중심으로 유료방송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또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종합 지원을 추진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다. 채널 할당제 등을 비롯한 PP 발전 전략의 상당 부분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PP 발전 전략이 당장 내년 3월 한미 FTA 시행에 따른 대비 방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더 큰 문제다. 단순히 유관 단체 늘리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미래부는 PP 발전 전략을 통해 2017년까지 PP 시장에서 총 1조5천억 원 규모의 매출 증대와 1천601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PP 발전 전략 발표 시작부터 적지 않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미래부의 기대대로 진행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백선하 baek@kobeta.com

DCS 허용, 합산 규제 ‘전쟁’ 벌어지나

접시없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DCS 허용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ICT 특별법 고시가 확정되며 임시 서비스 허용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방송 의무위반 판정을 받으며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KT스카이라이프의 DCS 허용 방안이 어떤 흐름을 탈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방송 업계에는 몇 달 전부터 KT스카이라이프 인사들이 주무부처인 미

래창조과학부 담당 공무원과 접촉하며 DCS 임시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이런 와중에 ‘설’은 ‘임시 허가’라는 윤곽을 잡아가게 되었다. 최근 미래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보 게재 등을 포함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KT스카이라이프도 이러한 움직임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 위반이라는 일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위성방송의 DCS가 초읽기에 돌입한 셈이다.

민서진 sedjin@kobeta.com

지상파 UHD로 브라질 월드컵을!

KBS와 SBS가 6월 29일 새벽 5시부터 시작된 브라질 월드컵 16강 경기를 지상파 UHD로 생중계했다.

현재 지상파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UHD 실험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중계는 서울, 수도권에서 채널 54번, 53-1번을 통해 진행됐다. 이후 KBS와 SBS는 16강전 외에도 8강전과 결승전을 UHD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브라질 월드컵 지상파 UHD 중계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접수신가구에 한정해 방송된다. 이에 LG전자는 삽입형 동글을 무상으로 지원해 지상파 UHD 중계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삼성전자도 뒤늦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 지상파 UHD 실험방송은 700MHz 대역 주파수를 활

용한 고품질 뉴미디어 플랫폼 확장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신이 해당 주파수의 일부를 법적인 효력 없이 점거하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이번 지상파 UHD 실험 방송의 성공은 해당 주파수 할당에도 큰 영향을 미칠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상파 직접 수신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에도 일정 정도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된다.

민서진 sedjin@kobeta.com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 마디

“지상파에 700MHz 대역 주파수를 주자고 했던 전임 양문석 상임위원과는 생각이 다르다”(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700MHz 대역 주파수에 국가 재산망이 필요하다는 사견을 밝히며…

방통위는 방송인데, 방송을 부정하시니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방송국에 PD와 기자만 있는 것으로 아는 건 아니시죠?

“자막만 보는 사람도 많다. 조용히 해놓고 보는 사람들도 저를 포함해 상당히 많다”(방심위 합귀용 위원)

☞세월호 오보에 따른 방심위 소위원회 회의 도중, 자막은 오로지만 앵커멘트가 나왔던 JTBC를 비판하며…

위원님은 TV 시청할 때 자막만 보시는군요. 앞으로 특이한 시청 방식에서 기인한 새로운 형태의 방송 심의를 실효 기대해봅니다.

미디어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미디어 시청 패러다임이 생존의 갈림길에 섰다. 미국을 중심으로 이른바 1980~2000년대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는 코드 커팅의 수준을 넘어 지상파 직접 수신과 온라인 동영상 시청을 조합해 아예 자신이 주도하는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동영상시장조사업체 ‘nScreenMedia’가 최근 발표한 ‘View My Video · Consumer Digital Media Consumption’에 따르면 2013년 미국 브로드밴드 가입자 중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은 비중이 27%에 달하며, 해당 수치에서 무려 84% 이상이 유료방송 해지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미국의 밀레니엄 세대 중 브로드밴드에 가입한 젊은 시청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청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nScreenMedia’에 따르면 36%가 홈 비디오, 43%가 지상파 직접 수신, 50%가 유료 인터넷 동영상, 55%가 정액제 동영상, 80%가 무료 인터넷 동영상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한 가지 시청 행태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수치가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이는 곧 다양한 시청 행태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처럼 미국의 밀레니엄 세대가 유료방송을 멀리하고 지상파 직접 수신을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시청 행태를 가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로는 첫째, 다양한 온라인 미디어 창구의 발전과 둘째, 유료방송의 경쟁력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최진홍 rgdsz2@kobeta.com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이후삼
편집주간 | 이성의
편집위원 | 서상원 안창준 송주호 나경록
편집장 | 최진홍
취재기자 | 백선하 이진범 강민정 민서진
기획실 | 강동균
인쇄인 | 성전&화성프린터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전화 | 02-3219-5635
팩스 | 02-2647-6813
트위터 | @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5

하반기 국회 미방위, 3개 핵심법안 처리할까

유료방송 합산, 클라우드, DB 산업

6월 23일 전격 사퇴한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여파로 완전한 개각의 윤곽은 빨라야 7월 중순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와 합을 맞춰야 하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체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 논의될 방송 관련 법안 중 공정성 및 통신과 단말기를 제외하고 유료방송 합산 규제 법, 클라우드 컴퓨팅 법, DB 산업진흥 법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IPTV 개정안의 유료방송 합산 규제 법은 신임 미방위원장에 임명된 홍문종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위원장과 야당 중진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기에 무게감이 상당한 편이다. 게다가 미래창조과학부는 위성방송의 DCS 허용을 전제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유료방송 합산 규제 법을 처리하기로 이미 뜻을 모았기 때문에, 하반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

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내년 말 제정될 예정인 통합 방송법이 유료방송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기존의 정책과 결을 달리하는 유료방송 합산 규제 법이 ‘유료방송 공정 경쟁과 독과점 방지 VS 강력한 유료방송 육성’의 프레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법안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KT가 법안의 완전 폐기에서 3분의 1 점유를 50%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국회 미방위의 선택에 업계의 눈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IPTV에 있어 KT와 경쟁자인 두 업체는 유료방송 합산 규제 법안이 하반기에 통과될 것으로 믿고 벌써부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4월 30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를 통해 하반기 국회에서 유료방송 규제 합산 법의 통과를 낙관해 관심을 모으기

도 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법은 국회 미방위보다 부처인 미래부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양희 장관 내정자도 7월 30일 재보선 선거 전에 클라우드 컴퓨팅 법과 관련된 공청회를 염두에 두고 있을 정도다. 다만 해당 법은 국가 및 공공기관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국내 산업을 키우자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지상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과 같은 국정원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과 김을동 의원, 그리고 미래부가 발의한 DB 산업 진흥 법은 여야의 이견이 없다. 이 또한 빠른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결수령을 거쳐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진홍 rgdsz2@kobeta.com

UHD 방송, 돈 내고 보라?

UHD 보편화 시대 성큼 … 정책은 되레 뒷걸음

최근 지상파 DMB를 향한 불멘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상파 DMB로 브라질 월드컵 경기를 시청하는데 선수 얼굴이나 이름, 점수 등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화질 기능이 더해지기는 했지만 일부 스마트폰과 채널에는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화질 기능이 적용돼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선수 얼굴이 뭉개지고, 등 번호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것은 여전하다. SD급 화질의 지상파 DMB가 HD 화질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엔 역부족인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선명한 화질에 대한 시청자들의 욕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화질 즉 화면 해상도는 화면을 구성하는 점(화소)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가 흔히 DMB를 통해서 보는 SD급 해상도는 720×480으로 가로 720줄, 세로 480줄이 배열된 화면을 보는 것이고, HD급 해상도는 1280×720 이나 1920×1080으로 SD급보다 가로줄과 세로줄이 더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다. 가로줄과 세로줄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화면은 더 선명해지고, 잔상도 남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HD 화질로 TV를 시청하던 시청자들은 SD급의 화면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시장조사업체 NPD 디스플레이서치의 ‘세계 TV 교체 연구 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청자들이 TV를 교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화질을 꼽았다. 화질은 총 148점으로 음향, 가격, 사용 편의성 등을 제치고 TV 교체 시 가장 고려되는 부분으로 선정됐고, 음향이 그 뒤를 이었다.

UHDTV의 보편화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

란 전망도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비롯된다. 국내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UHDTV를 한 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UHDTV 구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HD와 SD 화질이 확연히 구분되듯이 UHD와 HD도 마찬가지다. UHD의 음향 역시 HD의 음향과는 차별화되어 있다. 현재 시장 반응으로 볼 때 가격이 조금만 더 떨어진다면 UHDTV 구매 가구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역시 향후 2년 내에 UHDTV의 보편화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NAB Show 2014’에 참석한 고든 H. 스미스 전미방송협회 회장은 “UHD 방송은 이미 세계적 추세이고 향후 2년 이내에 보편화가 완료될 것”이라며 UHD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UHD 정책은 시대를 거스르고 있다. 7월 2일 열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총회에서 34건의 표준 후보안 중 유일하게 지상파 UHD 방송 표준만 부결시켰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지상파 UHD 방송용 주파수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 표준 제정이 미뤄지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내놓고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방송 표준이 제정된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의 방송 표준만 제정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산업적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미 지상파방송은 2차례에 걸쳐 실험 방송을 실시했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UHD 방송 표준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

송 표준이 결정되어야만 UHDTV 생산 시 UHD 방송 수신기를 내장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UHD 보편화 시대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듯이 지상파방송 없이는 UHD 시대로 나아갈 수 없다. 현재 국내 콘텐츠의 80% 이상을 지상파방송이 생산하고 있는데 UHD 시장에서의 성패는 콘텐츠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UHD 콘텐츠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UHD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콘텐츠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제작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이유로 지상파 중심의 UHD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상파방송이 UHD 방송을 시작한다면 콘텐츠 부족 현상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국민 복지 증대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제기된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 주축으로 UHD 방송을 해야 누구나 다 UHD 화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HD 방송을 본 사람은 SD 방송에 만족할 수 없다. UHD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전시회나 시연회 등에서 UHD 방송을 본 사람들은 HD 방송과의 차이를 확연히 느낀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처럼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중심의 UHD 정책만 고집한다면 지불 능력이 있는 시청자들만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디지털 빈부 격차를 줄여 보편적 정보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앞장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수첩 김재홍 상임위원, 방송 공공성을 부정하나

최근 소소하다면 소소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기관지로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발언이 레이더망에 걸렸습니 다. 주인공은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700MHz 대역 주파수 발언입니다. 6월 26일, 그러니까 제가 MBC 방송기술인협회 이취임식에 소위 ‘짜사’로 출동했을 때 일입니다.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최동환 회장님과 어색한 헤어짐을 뒤로하고 근처 언론사에서 기사를 만나고 복귀할 무렵,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 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의 국가 재난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전까지의 논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는군요.

처음에는 그 뜻을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의 뜻이 국가 재난망을 해당 주파수에 넣는다는 전제로 모바일 공개로 플랜을 폐기해 ‘국가 재난망+방송’으로 가자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재난망+통신’으로 가자는 것인지 쉽게 감이 오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이후 들어온 정보를 검토해보면, ‘국가 재난망 구축 문제로 지금까지 방송과 통신이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두고 싸운 의미가 사라진다’라는 분석의 끝이 결국 ‘국가 재난망+통신’을 가리키고, 김 상임위원이 모바일 공개토 플랜에 포함된 40MHz 폭 통신 할당의 법적인 허구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결국 ‘국가 재난망+통신’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사료됩니다.

결정적으로 해당 주파수의 방송 할당을 주장했던 양문석 전 상임위원과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확실히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김 상임위원의 발언은 위험합니다. 물론 방송이 절대적인 선(善)이며, 통신이 절대적으로 악(惡)은 아니기에, 김 상임위원의 발언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방송의 공익성을 관장하는 방통위의 상임위원이, 그것도 정권을 견제하고 올바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너무나 쉽게 방송, 무료 보편적 플랫폼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 다.

이견의 여지는 있으나, 정부적인 판단을 제 거하면 해당 주파수의 주인은 방송쪽으로 무게가 쏠립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도 미

(1면에 이어)이는 모바일 공개토 플랜 2.0의 상위위 통신 40MHz 폭 통신 할당이 방통위원장 고시가 아니기에, 이를 원점으로 돌려 ‘국가 재난망+방송’의 공공대역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와 결을 함께한다.

이런 상황에서 TTA의 근간을 이루는 통신사들이 700MHz 주파수를 활용한 UHD를 준비하는 지상파 표준안을 부결시킨 것은, 이번 결정이 주파수 수급까지 염두에 둔 통신사의 정책적 포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준다.

국과 비교해도 국내 통신사들은 가입자에 비해 막대한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주파수의 글로벌 통신 활용설’은 남미와 일부 중동국가가 글로벌의 통칭이 아니기에 이미 오래 전 근거를 상실했으며 모바일 트래픽 해소라는 근본적인 이유도 최근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출시 및 모바일 IPTV 사업 확충을 보면 상당한 의심이 갑니 다.

그런데 방송은 어떤가요. 당장 700MHz 대역 주파수가 없으면 ‘원천적인 기회가 박탈됩니다’ 사건입니다만, 방송의 해당 주파수 할당은 헌법 제34조 1항의 생존권과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박한 것은 방송입니다.

하지만 절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오냐 오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대승적으로 통신이 방송보다 주파수 할당에 있어 더 큰당위성을 가져간다면 김 상임위원은 소신있게 발언한 셈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방송의 플랫폼은 국가 기간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온전히 접근성의 개념으로 공공성을 내포합니다. 그런데 김 상임위원은 국가 재난망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방송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뒤안수를 폈습니 다.

부디 6월 26일 사석에서의 김 상임위원 발언이 ‘와전’되었기를 바랍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통신의 주파수 할당을 주장했다면 그에 합당한 데이터를 보여주며 반박하겠지만, 방송의 공공성을 관장하는 방통위 ‘야당’ 상임위원이 방송의 플랫폼적 공익성을 부정한다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은 공공성을 가지고, 그 공공성은 플랫폼의 균전함을 무기로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설마 세월호 참사 당시 갑작스럽게 쏟아진 통신 데이터로 그 대단한 스마트폰이 진도에서 불통이 되었던 것을 잊은 것은 아니겠지요? 저도 스마트폰 참 좋아합니다만,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플랫폼에 공공성이 있습니 다. 냉정하게 봐서 말입니다. 지상파 UHD 표준안 부결과 더불어, 또 한 번 위기의 냄새가 느껴집니다.

(‘수첩’은 취재 과정에서 겪었던 인상적인 사건을 편안한 형식으로 서술해 사안에 대한 이해와 배경을 더욱 쉽게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도덕성 논란에 이어 정책 소신도 없어”

최양희 후보자, 소극적 답변으로 청문회서 못매

7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 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예상대로 세금 탈루 의혹, 병역법 위반 의혹 등의 도덕성이 도마 위로 올랐다. 또한 방송 통신 정책을 두고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발언을 번복하기도해 의원들의 거센 지적을 받았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아파트 매매와 매수를 할 때 다윤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 우상호 의원 역시 “재산의 상당수가 담여가 아닌 부동산 매매 차익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투기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매매 차익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며 최 후보자의 답변을 요구했다. 최 후보자는 의원들의 지적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의원들의 질타는 끊이지 않았다.

전병헌 의원은 “포스코 ICT 사회이사로 6년간 2억5800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지난 2004년 투기 지역 지정 직전에 농지를 매수한 뒤 농사를 짓지 않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추밭을 급히 조성했다는 이른바 ‘급조 고추밭’ 논란을 두고 “이는 누가 보더라도 고추밭으로 위장하기 위한 모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방송 통신 현안에 대한 최 후보자의 정책 검증도 이어졌지만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UHD 정책에 대한 질문은 끊이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정보통신기술협회가 지상파 UHD 방송 표준안을 부결시킨 사안을 언급하며 지상파 방송사가 UHD 보편적 서비스를 할 수 있는냐고 물었고, 전병헌 의원은 “콘텐츠 제작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지상파가 배제된 채로 UHD 상용화가 이뤄질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지상파방송은 콘텐츠 산업의 핵심이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최 후보자의 태도에 의원들은 도덕성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적 소신도 없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백선하 baek@kobeta.com

[분석] 공공재의 사유화, 주파수에 집중해야

700MHz 대역 주파수와 한국 축구

수년을 끌어온 700MHz 대역 주파수를 둘러싼 논쟁이 정말 막바지에 이르렀다. 물론 일각에서는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 주파수 할당이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국가 재난망 논의가 돌발변수로 작용해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도 정리될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일단 주파수 공동 연구반이 7월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국가 재난망 논의가 비슷한 시기에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 추후 주파수 할당 논의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대역을 ‘국가 재난망+방송’으로 묶어 공공의 주파수 대역으로 설정하자는 ‘주파수 그린벨트’는 그 논의의 타당성을 신랄하게 부정당하는 중이다. 공공의 이익이 자연스럽게 소멸당하는 분위기인 셈이다.

과연, 그 적폐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가볍게 눈을 돌려 최근 브라질 월드컵에서 초라하게 귀국한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을 돌아보자.

주파수 할당과 마찬가지로 공익과 사익의 경계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2014년의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표팀은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유는 간

단하다. 초라한 성적을 남겼다는 점.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엔트르’에 기반한 축구계 전반의 패단을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책임이 대표팀과, 홍명보 감독에게만 있을까? 아니다. 더 핵심적인 원인제공은 바로 대한축구협회다. 이들이 홍 감독을 사지로 몰아넣고, 대표팀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이견을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 결국 간단히 말해 원인은 대한축구협회다. 이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구 국가 대표팀은 입국장에서 옛(사탕) 세례를 받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파고들어야 한다. 대한축구협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두 가지다. 하나는 ‘관피아’에 이어 ‘축피아’로 표현되는 폐쇄성. 그리고 ‘협회의 사유화’다. 대한축구협회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인사를 무리하게 감독으로 기용하는, 너무나 마피아스러운 ‘축피아’의 행태를 보였으며, ‘현대’로 대표되는 특정 기업의 대한축구협회 사유화는 강력한 동력의 상실을 유발했다.

이는 현재 주파수 할당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는 거대한 축구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적으로, 그리고 맹목적

으로 통신의 입장만 강력하게 대변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에서 시작된 일종의 끈끈한 그들만의 연결고리가 ‘관피아’의 행태로 부각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 세계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설은 완벽한 허구며, 모바일 트래픽 해소라는 근본적인 이유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및 모바일 IPTV 확충으로 그 논리적 기반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미래부는 공식적인 발언을 삼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경로로 해당 주파수의 통신 활용을 지지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뜰이나 공공 인프라의 민영화, 사유화가 화두인 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통신사에 사유화, 종속화 시킨다면 세수 확보라는 일차적 이득을 넘어서는 상당한 적폐가 사회 전반에 연쇄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현대가 대한축구협회라는, 아니 대한민국 축구라는 공공재를 사실상 집어삼킨 것처럼, 통신사가 현존하는 공공적 재원인 주파수를 대부분 흡수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축구라는 공공재가 어떻게 망가지고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는 확신하지 않았다.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어떻게 보존하고 공공적으로 육성할 것인지는 앞으로의 결정에 달려 있다. 최진홍 rgdsz2@kobeta.com

‘종편 의무 전송 폐지’ 다시 고개

종합편성채널의 의무 전송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6월 25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유료방송 법제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향’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강명현 한림대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종편이나 보도 채널을 의무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며 “종편이나 보도 채널의 의무 편성을 사업자 간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종편의 의무 전송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의무 전송’은 ‘황금 채널 지정’과 함께 종편에 주어진 가장 큰 혜택으로 꼽히고 있다. 케이블과 위성방송 사업자는 채널 선택권과 상관없이 유료방송 사업자의 채널 구성을 제한하는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종편을 반드시 채널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지상파방송인 KBS 2TV와 MBC, SBS도 의무 전송 채널이 아니다. 그런데 공공성이나 공익성과는 거리가 먼 종편이 오히려 의무 전송 채널에 포함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강 교수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하며 KBS 1TV와 EBS를 제외하고 지상파 채널도 의무 전송 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종편을 의무 편성에서 사업자 간 자율로 맡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편의 입장에서든 모든 채널에 대해 의무 편성을 송출하는 특혜를 받으면서 동시에 프

로그램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는 사회적 여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초반에 종편이 자리를 잡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종편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의무 전송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518 왜곡 보도 등을 미루어 볼 때 검증되지 않은 왜곡된 여론을 조장하고, 일방통행식 방송만 일삼고 있는 종편의 의무 전송 폐지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종편의 의무 전송 폐지는 출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다. 학계뿐 아니라 업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전반에서 종편 4사가 각각의 색깔을 드러내고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의무 전송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있다.

언론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김모(30)씨는 “의무 전송이라는 건 소외된 사람들이나 집단의 입장을 꼭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미 여론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인 종편의 의무 전송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출범부터 특혜라고 사회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듣지 않는 것 같다. 정말 이제라도, 다른 곳은 몰라도 언론계라도 상식이 통했으면 좋겠다”며 지금이라도 종편의 의무 전송이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지상파 순이익 감소…중간 광고로 탈피해야” 광고 매출 상승 위해 ‘중간 광고’ 절실

지상파 방송 3사의 순이익이 지난 2년 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6월 26일 발표한 ‘2013 회계연도 방송 사업자 재산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 방송 3사의 순이익 합계는 696억 원으로 2012년보다 332억 원이 감소했다. 2011년,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순이익이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지상파 경영 여건 악화는 광고 매출 감소에서 비롯됐다. 실제 지난해 지상파방송 3사의 광고 매출은 1조5321억 원으로 전년대비 829억 원 감소했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등을 비롯한 방송 시장 내 경쟁 심화와 온라인 모바일 등 타매체와의 경쟁, 방송 광고 시장의 전체적인 침체를 광고 매출 감소 원인으로 꼽았다.

지상파방송의 지속적이 광고 매출 하락이 눈에 띄게 드러나자 중간 광고 허용 여부에 다시 한 번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매출 하락세를 상쇄세로 돌리기 위해선 사실상 중간 광고라는 카드가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그동안 프로그램 투자 등으로 한류를 주도한 지상파 방송사가 경영 위기를 넘어 이제는 생존 문제에 돌입했다. 광고 시장은 매년 조금씩 성장하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매출은 계속 줄어든다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 이상 제작에 투자할 수 없다”며 해마다 상승하는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콘텐

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중간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지상파방송 3사 사장단은 “지상파방송만을 과도하게 옥죄는 차별적 광고 제도가 지상파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며 중간 광고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유료방송과 종편의 거센 반대,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이 공정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뿐더러 간접 광고에 대한 거부감도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 광고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중간 광고 논의는 조용히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최근 방통위의 ‘2013 회계연도 방송 사업자 재산 상황’ 발표로 지상파방송의 광고 매출 급감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중간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차츰 고개를 들고 있다. 한류의 지속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국내 핵심 콘텐츠 공급자인 지상파방송의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들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광고 허용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케이블을 비롯한 유료 방송 사업자의 반대는 물론이고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도 중간 광고 도입에 대해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고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친 만큼 중간 광고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백선하 baek@kobeta.com

MBC 노조, 해직 언론인 복직 촉구 법원 “해직자 아닌 근로자, 2년 간 밀린 임금도 지급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가 해직자들의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MBC 노조는 “회사는 즉시 해직자들을 복귀시켜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서울남부 지방법원은 6명의 해직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면서 더 이상 해직자 신분이 아닌 6명의 직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6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년 MBC 총파업 당시 해직된 MBC 언론인 6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들이 직원이며, 회사가 해고한 시점부터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MBC 노조는 지난 1월 정계 무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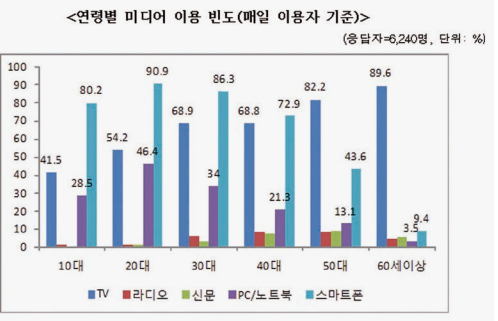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에서 잇따라 MBC 총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은 매우 상징적이고, 합당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MBC 노조는 “인사발령을 내고, 원 소속 부서로 보내야 함과 동시에 지난 2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법원이 왜 일관된 내용의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는지 사측은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MBC 사측의 입장은 변함없다. MBC 노조에 의하면 사측은 3심까지 간다며 해직자들을 여전히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측의 태도는 흥진표 한국PD연합

[이슈] 본방사수 시청률? 이제는 NO 통합 시청률 필요엔 공감… 적용 기준과 방식은 합의 안돼



전통적인 TV 시청 패턴이 변화하면서 시청률 조사 방식 개편이 업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TV 시청 방식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더 이상 집 안 TV만을 대상으로 한 시청률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TV 외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리고 VOD 등 다양한 매체의 시청을 측정할 합리적인 기준과 방식 찾기가 쉽지 않아 시청률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 중순부터 지상파방송의 본방송과 재방송, 케이블, IPTV의 시청률을 합산한 이른바 ‘통합 시청률’이 발표된다. 대표적인 시청률 조사 기관 중 하나인 TNmS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지상파로 본방송을 시청하지 않고,

IPTV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시청하거나 파일을 내려 받아 보는 이들이 50%가 넘는다”면서 지상파 시청률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지난 5년 동안 통합 시청률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KISDI 정보사회분석실 정용찬 ICT통계분석센터장 역시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미디어 이용의 개인화 이동화 네트워크화로 고정형 TV 수상기에 국한한 현재 TV 시청률 측정이 통합 시청률 측정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시청률 조사 방식의 개편을 주장했다.

사실 통합 시청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통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늘었고, IPTV의 성장세로 본방송이 아닌 VOD로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해 N-스크린 시청기록 산출조사를 올 신규 사업을 편성해 스마트폰과 PC 시청률을 어떻게 조사해 통합 시청률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지 연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방통위는 시범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채널 산정을 위한 조사와 각 매체별 가중치 부여 등 아

방심위, ‘재미있게’ 운영된다

‘너만은 꼭 제재한다’…“자막만 보는 사람도 있어”

뉴라이트 계열의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미있게’ 운영되고 있다. KBS의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검증보도부터 세월호 참사 오보 제재에 ‘기발한’ 발상으로 JTBC를 끼워넣는 일까지 그 면면도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평이다.

최근 방심위는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를 소집해 KBS의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검증보도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일단 특위는 대부분 ‘중징계’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비록 방심위가 아닌,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결과는 심의에 있어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방심위가 특위의 결과를 발판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제재를 가해왔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KBS의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검증보도의 경우, 논란이 되었던 교회 강연 영상의 전체를 시청해도 국민의 의식수준과 상당히 떨어진다 것에 중론이 쏠리기 때문에, 방심위가 이를 보도한 KBS에 중징계를 내리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근 2기 방심위의 무리한 제재가 법원에서 연달아 뒤집히는 상황에서 KBS의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검증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 가능성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7월 2일 열린 방심위 산하 소위원회도 논란이다. 당시 소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기간 오보를 낸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

회 회장의 발언과 이어진다. 최근 한 토론회에 참석한 홍 회장은 “법원에서 해고를 비롯한 징계 등이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영진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 회장을 비롯한 언론사 내부 관계자들은 “언론인들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현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다”며 언론인들이 언론사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보장받을 때 비로소 언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언론사와 별도로 개별 언론인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의 위기, 실패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MBC 사측이 해직자 복직이라는 카드로 언론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직 연구할 게 많다”며 충분한 연구를 진행한 뒤 기술적 검토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통합 시청률 산정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방통위의 계획대로 진행되기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TNmS가 밝힌 통합 시청률을 보면 VOD 시청률이 있는데 VOD를 시청률에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VOD의 경우 본방송 시청과 달리 빨리 보기나 점핑, 스킵 등이 가능하다. 또 한 사람이 여러 번 봐도 여러 명이 본 것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청률 개념에 넣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시청 연령층이 높은 TV와 젊은 층이 보는 모바일의 시청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며, 각 매체별 영향력은 어떻게 측정해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게다가 각 매체별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관건이다.

새로운 시청률 조사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문가뿐 아니라 업계 대부분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시청률 조사 방식 개선을 둘러싼 적용 기준과 방식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제각각인 만큼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백선하 baek@kobeta.com

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최초 보도 당시 ‘학생 전원구조’ 자막을 내보낸 것을 두고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한 것이다.

그런데 당초 사무처에서는 종편인 MBN과 JTBC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특히 JTBC의 경우 자막으로는 ‘학생 전원구조’를 내보냈지만 영상과 음성으로는 다른 가능성을 충분히 포착했다. 사무처도 이를 인정해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하지만 김성목 소위원장은 “JTBC만 봐줄 수 없다”는 이유로 JTBC 안건을 직권상정했다. 이어 함귀용 위원은 JTBC가 멘트를 통해 추가 취재 과정을 전달했지만 자막으로 ‘학생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냈기에, 당연히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었다. 이 과정에서 함 위원은 “자막만 보는 사람도 많다. 조용히 해놓고 보는 사람들도 저를 포함해 상당히 많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단신 뉴스

미래창조과학부는 7월 4일 오후 6시 ‘한·중 평요우(朋友) 콘텐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KBS·MBC가 중국 CCTV와 ‘방송 다큐 공동 제작 업무 협력(MOU)’을 체결했다.

미래부는 국내 콘텐츠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국내 콘텐츠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 특히 중국으로의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평요우 콘텐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7월 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과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미래부 측은 “양국 방송사 간 MOU 역시 미래부가 지난해부터 광전총국에 방송 다큐 공동 제작 프로젝트를 제안해 두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그동안 ‘평요우 콘텐츠 프로젝트’로 다져진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기획, 제작, 방영 등 전 과정에 걸친 실질적인 공동 제작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MOU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MOU 체결에 따라 KBS와 CCTV는 ‘임진왜란’을, MBC와 CCTV는 ‘〈기후의 반란〉’을 각각 5부작과 4부작 다큐로 본격 제작할 예정이다. 총 제작

비용은 ‘임진왜란’ 20억 원, ‘〈기후의 반란〉’ 10억 원으로 양국이 절반씩 부담하며, 오는 2015년 다큐 제작 완료와 동시에 해외 공동 판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 콘텐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우수한 국내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및 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2014년도 스마트 콘텐츠 센터 입주 기업 모집’을 6월 20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콘텐츠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래부의 핵심 중점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스마트 콘텐츠 제작, 서비스, 마케팅 등 관련 분야의 국내 중소기업으로,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장 4년까지 가능하다. 입주 기업으로 선정되면 사무공간을 비롯해 회의실, 휴게실, 자료실 등 부대시설을 무료로 제공받게 되며, 관리비는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법률, 특허, 회계,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통·번역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월드컵의 현장 브라질에서 중남미 지역의 ‘문화 한류’를 ‘경제 한류’ 열풍으로 확산하기 위한 ‘2014 코리아브랜드&한류상품박람회(Korea Brand &Entertainment Expo 2014)’를 공동 개최한다.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한류바람을 불러 일으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KOTRA 주관으로 오는 8월 13~15일 3일간 브라질 경제수도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KBEE 2014’는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을 목표로 한류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소개해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바이어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중남미는 인구만 5억 7천만 명에 이르며 지난 5년 간 연평균 4%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거대 신흥시장. 특히, ‘중남미 통합 경제 리더’ 브라질은 경제규모 1조 6천억 달러의 세계 경제대국으로, 전 세계 무역이 집중하고 있는 ‘월드컵’에 이어 2016년 ‘올림픽’ 개최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월드컵 및 올림픽 특수’를 노리는 글로벌 기업들의 브랜드 경쟁이 이미 뜨겁게 불붙고 있다.

민서진 sedjin@kobeta.com

‘유료방송 전성시대 2014’ 영향력 확대의 추악한 이면과 진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기점으로 정부의 유료방송 밀어주기가 점점 ‘대범’해지고 있다. 이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유료방송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총량제가 한시적이고 지엽적인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총리실에 제출할 ‘실적’을 만들기 위해 전사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최근 정부는 유료방송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은 토론회를 연이어 후원하며 바람몰이를 하고 있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며 뚜렷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자 정부가 나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선언하는 분위기다. 이미 정부는 케이블 MSO의 권역별 규제를 완화했으며 추후 케이블 MPP 매출 제한 규제도 풀어줄 기세다. 한때 ‘CJ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특혜’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단적인 사례로 6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미

래부, 방통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후원한 한국방송학회 주최 토론회를 들 수 있다. 사실상 유료방송 규제완화의 면죄부 발행을 위해 마련된 본 토론회에서 정운식 강원대 교수는 각 플랫폼에서 의무재송신 채널 15~19개를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별도의 방송평가 제도를 만들어 이를 유동성 있게 조절하자는 의견을 냈다. 얼핏보면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된 종합편성채널 특혜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이는 사실 한미 FTA를 기점으로 토종-거대 유료방송 사업자를 양산하자는 주장과 결을 함께 한다. 간단하다. 의무재송신 채널 지정과 같은 민감한 부분을 방송평가 제도와 같은 계량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에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정부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편 재송신의 경우 ‘누가 봐도 재송신 탈락이 확정적이지만’ 객관적 수치를 제외하고 주관적 수치에서 상당한 점수의 편차가 있었다. 해당 평가를 누가 하느냐도 문제다. 종합하자면, 정 교수의 주장은 의무재송신 지정이라는 ‘권위’를 흔들 ‘규제완화’를 주문한 셈이다. 물론, 이는 의무재송신 확대를 원하는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있어 일종의 ‘여지’로 남겨질

수도 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공성의 제도적 보장을 소유 및 겸영제한으로 제재하고 컨트롤하지 말고 내용규제, 사후규제, 평가제도, 시청자의 참여보장 장치로 전환하자는 정 교수의 발언도 위험하다. 이는 사실상 유료방송의 모든 규제를 풀어주고 사업자의 인수합병을 촉진시키자는 뜻인데, 그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지는 명약관하다. 바로 대기업이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불거진다. 현재 정부는 유료방송의 규제완화를 실시하며 방송의 산업화를 고집해 일종의 ‘부의 낙수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의 최종목표인 ‘부의 낙수효과’는커녕 ‘대기업 쏠림’현상만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진흥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꼴이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 한동안 쓸모없는 정부의 규제로 막강한 잠재력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정부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는커녕, “한 달 안에 규제 30개를 철폐하겠습니다”라는 규제 총량제를 발표한다. 기업들은 황당하다. 반드시 필요한 규제완화가 절실한 마당에 숫자를 정해놓고 규제를 철폐한다니.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규제완화를 실시해버린다. 그런데 막상 내용을 보니 더 가관이다. 규제완화는 규제완화인데, 그 규제완화가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적인 방향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잡아먹기’ 위해 규제들을 없애고 있다.

지금 정부의 유료방송 규제완화는 이런 식이다. 한미 FTA 운운하며 대기업 밀어주기를 긍정적인 규제완화와 동일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기본방침과도 맞지 않는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군소 PP 상생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통령과 따로 놓고 있다. 딱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조화’다. 케이블 MSO 권역별 규제완화를 통해 케이블 MSO들이 몸집을 불리고 지역 SO를 흡수해 ‘로컬’에 기반한 케이블의 기본적인 속성을 무시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긍정적인’ 규제완화의 산물인가.

이처럼 정부의 유료방송 규제완화가 사실상 대기업 중심의 지원으로 가득이 잡히면서, 그 반대급부인 무료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의 약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등장한 유료방송 UHD와 같이 정부의 노골적인 ‘밀어주기’에 국가 인프라의 성격을 가지는 지상파 플

랫폼이 사상 초유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이는 2015년 제정 목표인 통합 방송법의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현재 비밀리에 추진 중인 통합 방송법 TF 내외부에서는 유료방송 규제완화는 물론, 지상파의 플랫폼 지위를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UHD 정국에서 지상파의 UHD 가능성을 콘텐츠 제작에만 방점을 찍으면 위험한 이유다. 정부는 지상파를 PP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을 아우르는 UHD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지상파가 “우리는 콘텐츠 제작 능력이 있어요”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그냥 지상파가 UHD PP로 남길 원하는 정부의 의도와 모호하게 오버랩된다.

종합하자면, 현재 정부는 규제 총량제의 기치를 내걸고 KT와 CJ 같은 대기업에게 규제완화의 탈을 쓴 노골적 지원을 서슴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료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은 말살된다. 비약이 아니다. 최근 정부는 브라질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된 지상파-유료방송 CPS 정국에 있어 각 이해 당사자에 공문을 보내 “지상파의 공적책무는 유료방송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정의내린 적 있다. 이는 오롯이 통합 방송법에 반영되어 정부의 방송 산업화 정책이 유료방송 대기업 지원, 지상파 플랫폼 말살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6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의미심장한 발표를 했다. 방통위가 발표한 ‘2013 회계연도 방송 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케이블 PP 방송매출은 6조7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이 증가했고 케이블 SO의 방송매출도 4.4% 증가해 2조3792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상파의 방송매출은 1.9% 감소한 3조8,963억 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도 38.9% 감소한 1,241억원이다. 지상파 매출은 하락하고 유료방송 매출은 상승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밀어주기의 탈을 쓴 ‘규제완화’라니!

현재 유료방송은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편승해 교묘한 프레임을 구축했다. CPS 논란을 유료방송 사업자와 지상파 사업자의 문제가 아닌, 국민과 지상파 사업자의 대결로 몰아갔듯이, 유료방송 규제완화를 대기업 중심의 발전이라는 ‘진실’에서 빗겨나게 만들어 본질을 흐도했다. 거기에 무료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의 말살은 일종의 ‘딴’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정점에는 통합 방송법이 있으며, 동일규제 동일서비스의 이름을 빌린 일종의 방송 산업화는 차근차근 방송의 공공성을 갉아먹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이 루퍼드 머독의 수제자가 되는 것도 멀지 않아 보인다.

최진홍 rgdsz2@kobeta.com

지상파 UHD 표준안 부결, 2014 ITU 전권회의를 겨누나



그렇기 때문에 TTA가 지상파 UHD 표준안을 ‘꼭 집어’ 부결시킨 사례는 정치적이고 정부적인 판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통신사는 IPTV라는 미디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KT는 위성방송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통신사들이 모여 구성된 TTA가 미디어 플랫폼 경쟁자인 지상파 방송의 UHD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가로막는 것은 어찌면 당연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지상파는 실험 방송 단계에 머물고 있는 UHD 상용화를 위해 브라질 월드컵 중계를 통한 기술력 제고와 더불어 700MHz 대역 주파수를 원하고 있는데, 통신사도 모바일 트래픽 해소를 이유로 해당 주파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여기서 그림이 그려진다. 통신사가 절대다수인 TTA 총회는 지상파 UHD 표준안을 부결시켜(심지어 표결까지 가지도 못했지만) 궁극적으로 지상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지상파 UHD의 전제조건인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의 손아귀에 넣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해당 주파수의 경매를 통해 세수 확보를 노리는 정부의 이해관계도 절묘하게 일치한다.

하지만 이번 TTA의 지상파 UHD 표준안 부결은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다. 이미 정부와 통신사는 해당 주파수의 ‘완전 할당’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현재 통신사들은 700MHz 대역 주파수 문제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지만, 역설적으로 대의명분에 있어서는 수세에 몰려있다. 정부와 자본, 그리고 언론이라는 든든한 아군이 있지만 공익을 앞세운 방송과 시민사회단체의 맹공에 잔뜩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은 700MHz 대역 주파수에 국가 재난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기점으로 해당 주파수의 ‘국가 재난망+통신’을 주장했으나, 이마저도 700MHz 대역 주파수 상하위 40MHz 폭 통신 할당을 전제로 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이 방통위원장 고시사 아니라고 반박하며 해당 주파수를 ‘국가 재난망+방송’으로 묶이는 공공대역으로 삼자는 방송의 논리에 밀리고 있다.

이러한 통신의 수세는 최근 열린 통신학회 세미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신학회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 할당을 주장하며 이미 오래전 논리적 허구성이 드러난 해당 주파수 전세계 통신 활용설에만 매달리고 있다. 물론 모바일 트래픽 해소라는 당위성도 최근 통신사들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출시 및 IPTV 사업 확충으로 타당성을 상실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이 오면 통신과 뜻을 함께하는 정부는 눈을 밖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통신 주파수 할당의 당위성이 내부에서 격파당하면 ‘외부는 아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런 무리수가 2012년 WRC(세계전파통신회의)-12 당시 구 방통위의 ‘헛발질 보도자료’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구 방통위는 WRC-12에서 정식제도 아닌, 심지어 방송 선진국인 유럽이 반대해 논의를 미루기로 한 ‘700MHz 대역 활용방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마치 모든 나라가 해당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뿌렸다. 당연히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국내 언론사들은 구 방통위의 잘못된 보도자료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받아쫓고, 이는 지금까지도 ‘외교부의 CnK 추가조작 사건’과 더불어 두고두고 회자되는 정부의 ‘패착’으로 기억되고 있다.

하지만 ‘외부’에서 길을 찾는 것은 무리수라 할지라도 ‘여론전’에는 매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TTA의 지상파 UHD 표준안 부결에 따른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 미설정, 혹은 통신 유력설이 추후 2014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와 연결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UN 산하 193개 ITU 회원국의 장차관급 대표단이 참석하는 2014 ITU 전권회의가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올해 10월 부산에서 열리는데, TTA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ITU, WRC를 위시한 국제준화기구 및 회의의 지원 및 대응이다. TTA의 지상파 UHD 표준안이 부결되고 해당 주파수의 활용이

통신쪽으로 기운다면, 대한민국 미래부가 주최하는 2014 ITU 전권회의에서 이러한 부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는 주파수 공동 연구반의 결과와 별도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WRC-12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에 대한 논의를 결정하지 못한 관계로, 다가오는 2015년 WRC-15에서 해당 주파수의 활용을 결정하기로 된 상태다. 만약 2014 ITU 전권회의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이 통신쪽으로 흐른다면, 유럽이 굳건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WRC-15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이유로 7월 2일 TTA의 지상파 UHD 표준안 부결은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 활용을 위한 정치작업의 일환으로, 그리고 TTA와 2014 ITU 전권회의, WRC-15와 연계해 전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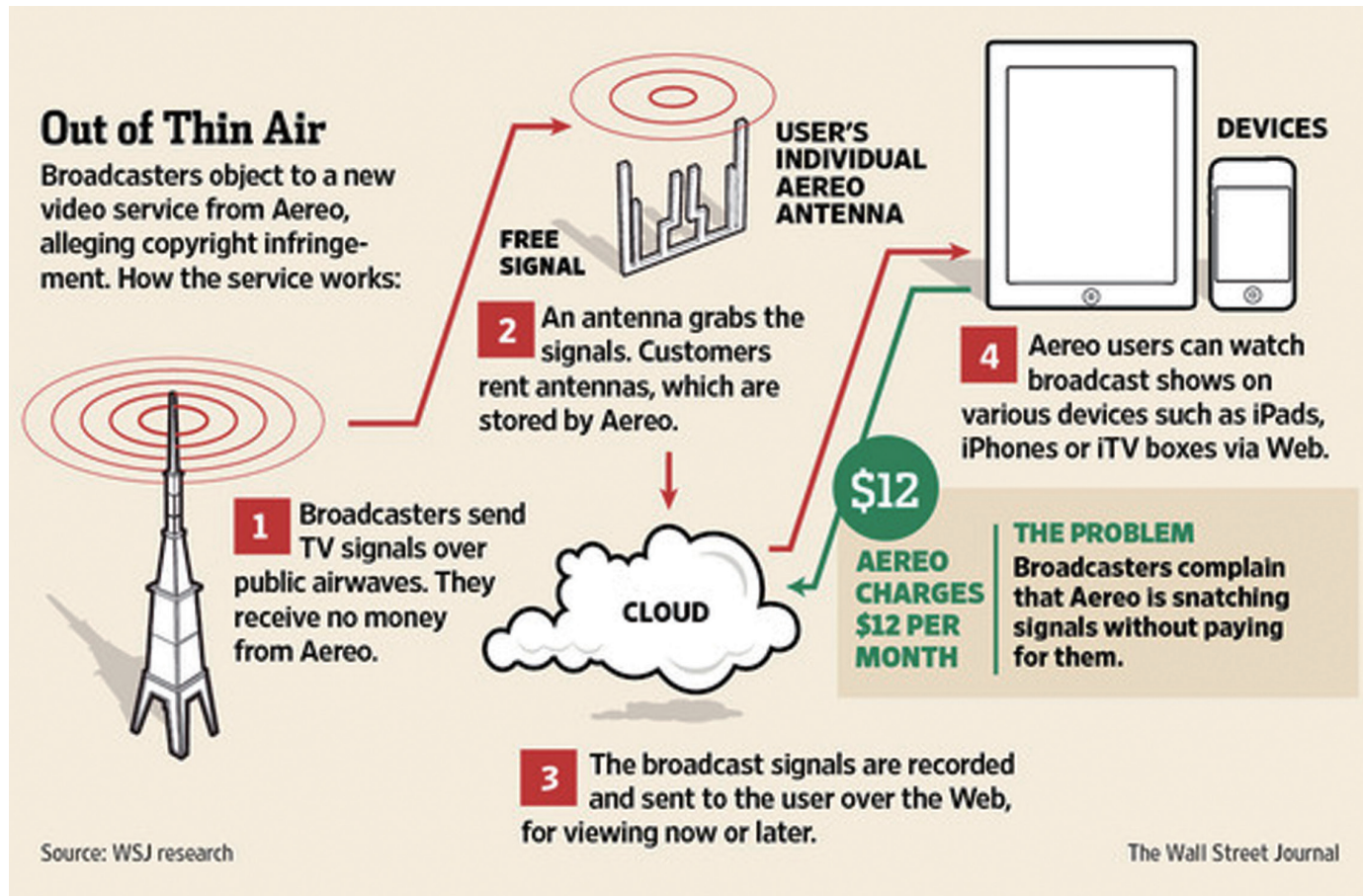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정보통신부와(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원화 과정을 거치며 노골적인 통신 육성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통신재벌, 이른바 통신 마피아(통피아)가 등장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물론 통신기술은 일상생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도구지만, 통피아들은 사업 추진 중 발생한 이윤을 국민에게 환원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에 소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런 탐욕의 역사는 결국 공공의 재원인 700MHz 대역 주파수까지 미쳤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정해진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있다.

당장 ICT 표준을 정하는 TTA의 구성에 대한 논의를 벌이는 한편, 700MHz 대역 주파수를 둘러싼 냉정한 판단이 수반되어야 하는 순간이다.

최진홍 rgdsz2@kobeta.com

에어리오의 패소, 무엇을 시사하나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에어리오가 결국 지상파와의 재판에서 패소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무엇을 시사하는가.



[1] 美, “에어리오 서비스, 지상파 저작권 침해” 세기의 판결, 콘텐츠의 저작권 인정으로 가다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에어리오 서비스의 지상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결에서, 현지시각 6월 25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에어리오가 지상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에어리오가 지상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브라질 월드컵 중계와 관련해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CPS(재송신료) 협상이 파행을 겪고 있는 국내 사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미디어 업계의 거물인 배리 딜러가 2012년부터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에어리오는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에 지상파방송의 신호를 받아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한 후, 가입자들에게 소형 안테나를 임대해 방송을 수신하게 하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다. ‘이중 OTT’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가입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만 시청할 수 있다는 것과 요금제에 따라 DVR 저장 공간을 최대 40시간까지 부여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런데 에어리오는 다른 유료방송과 달리 지상파에 CPS를 납부하지 않는다. 유료방송이 지상파의 신호를 받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당연히 CPS 부과 대상이지만, 에어리오는 안테나를 개별적으로 설치해 지상파의 신호를 받는 것은 무료라는 미국 현행법을 교묘히 활용해 CPS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제동을 걸고 나왔다. ABC, CBS, NBC 등 대형 방송사들은 에어리오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후로는 난타전이었다. 지방법원의 판결은 엇갈리지만 연방법원 1, 2심은 에어리오가 승리했다. 그러나 백악관까지 나서 에어리오 서비스가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계 미디어 및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도 에어리오 판결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고차 방정식이 되어 갔다.

이런 상황에서 4월 22일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결국 지상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적이용(private performances)과 공적실연(Public performance)의 개념을 에어리오 판결에 있어 정확하게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법은 사적이용(private performances)과 공적실연(Public performance)으로 구분된다. 사적이용은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콘텐츠를 받아 시청하고 저장하는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윤을 목표로 하는 회사가 콘텐츠를 받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계약에 의거한 저작권 법에 영향을 받는다.

지상파 방송사와 에어리오의 주장이 상충되는 대목이 바로 여기다. 지상파 방송사는 에어리오의 서비스가 공적실연에 있다고 보고 있지만 에어리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사적 이용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에어리오의 서비스가 개별 안테나-개별 가입자라는 명목상의 ‘도구’를 교묘하게 이용해 ‘지상파방송을 잡아 가입자에게 중개하는 방식’을 CPS 논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비록 개별 안테나와 개별 가입자의 의지가 사적이용에 해당된다는 전제가 있다고 해도 ‘플랫폼’을 깔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전적으로 ‘에어리오’다.

정리하자면, 케이블 업체처럼 지상파의 방송을 받아 가입자에게 송출하는 모델을 단순하게 세분화시켜 가입자 단위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미국 대법원이 주목한 부분도 이 대목이다. 게다가 국내는 물론 미국 고든 H. 스미스(Gordon H. Smith) 전미 방송협회 회장이 강조했듯이, 이번 판결은 CPS 계약에 있어 자유로운 사업자간 계약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브라질 월드컵 중계를 기점으로 모바일 IPTV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전선에서 CPS 전쟁이 터지고 있다. 일반적인 TV는 물론 모바일 IPTV와 지상파의 저작권 개념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에서 ‘돈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온전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지상파의 콘텐츠를 유료방송에 전달하는 것에 방송의 공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상파 직접 수신의 가능성을 배제한 형태와 법적인 보호를 받는 지상파 콘텐츠를 유료방송이 당연히 활용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찔한 발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판결 직후 에어리오 측 변호인은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불만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미국 지상파 방송사의 주가는 이날 큰폭으로 상승하며 지상파 콘텐츠의 보호를 자축했다. CBS 방송의 주가는 6.19%나 뛰었으며 ABC 방송의 모기업인 월트디즈니 주가도 1.48% 올랐다. 또 170개 방송국을 보유하고 있는 SBG 주가는 15%나 폭등했다.

최진홍 rgdsz2@kobeta.com

[2] 에어리오의 패소, 우리는? “지상파가 논리적 우위 지속할 가능성…그러나”

미국 지상파 방송사와 에어리오의 싸움에서 결국 지상파가 승리했다. 정당한 CPS 납부를 거부했던 에어리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패소 판결에 따라 코너에 몰렸고, 지상파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브라질 월드컵 중계권을 계기로 촉발된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CPS 헝거투기

는 모바일 IPTV 블랙아웃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그러나 파급은 미비한 ‘전선’으로 확장된 상태기 때문이다. 여기에 협회를 중심으로 뭉친 케이블과 입장을 달리하며 ‘간’을 보는 IPTV가 톱풀 뭉치면서 지상파를 겨냥한 언론 플레이도 상당한 편이다.

일단 미국의 사정을 예의주시하던 국내 업계 관계자들의 희비는 극명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지상파 콘텐츠의 법적인 지위 인정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은 한시를 놓는 분위기다. 물론 반대급부로 유료방송은 악재를 만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다. 자유로운 계약을 전제로 하는 CPS 계약에 있어 이미 공문을 발송하며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마냥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TV 블랙아웃은 이해 관계자 모두가 바라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CPS 계약에 있어 최대한 ‘정중동 모드’를 구사하며 이해 관계자의 불만을 종식시키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수는 정부의 속내다. 정부는 최근 ‘브라질 월드컵 재송신 분쟁 관련 정부의 입장’이라는 공문을 통해 지상파 콘텐츠의 유료방송 제공에 방송의 공공성이 있다는 믿음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지상파 직접 수신율이 20%인 상황에서 유료방송을 통한 지상파 콘텐츠 시청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계약 조건과 금액적 불합리함을 모두 무시하고 유료방송의 이익을 위해 지상파 콘텐츠를 ‘당연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는 분명 문제가 있다.

이는 CPS 계약 논란을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아닌, 지상파와 유료방송 가입자(시청자-국민)의 대결로 끌고 가려는 대다수 언론의 여론전과 결을 함께한다.

바로 이러한 ‘속내’가 자유로운 계약을 전제로 하는 CPS 계약에 있어 정부의 난입에 대한 일차적인 부담을 덜어준다면, 어쩌면 미국 연방대법원의 에어리오 패소 판결은 의미 없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도 있다. 가뜰이나 통합 방송법을 통해 플랫폼의 성격을 가지는 유료방송의 입지를 넓히고, 콘텐츠 제공을 통해 유료방송 UHD 생태계를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정부다. 여기에 최근 일각에서 SBS를 포함한 민영방송사의 소유 및 지배구조까지 완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판국이다. 유료방송과 CPS 계약에 있어 중점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SBS가 교묘한 편 가르기 프레임에 빠진다면, 어쩌면 ‘DCS-케이블 규제완화-동일규제 동일서비스’의 이면합의 의혹처럼 지상파 콘텐츠 저작권 ‘전선’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딜’을 할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최진홍 rgdsz2@kobeta.com

공중에 떠버린 700MHz 대역 주파수

방송과 통신의 할당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700MHz 대역 주파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국가 재난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해당 주파수를 둘러싼 북바전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여기에 지상파 UHD 표준안 부결이라는 암초를 만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당초 700MHz 대역 주파수는 방송이 활용하던 영역이었다. 하지만 2012년 12월 31일 전국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해당 주파수 활용은 일종의 여지를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 방송은 자신들이 쓰던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폭을 지상파 UHD에 활용해 무료 보편적 뉴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통신은 모바일 트래픽 해소를 이유로 해당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후로는 난타전이었다. 방송과 통신은 각각의 주장을 강조하며 해당 주파수 할당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다만 무제한 데이터 요금 및 모바일 IPTV 확충을 통해 주파수를 필요 이상으로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는 통신보다, 해당 주파수가 없으면 새로운 방송기술의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는 UHD를 접할 수 밖에 없다고 맞서는 방송의 처지가 더욱 절박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판단은 달랐다. 특히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통신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비판을 받던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시중 위원장 시절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폭 중 상하위 40MHz 폭을 전체회의를 통해 전격적으로 통신에 할당하기로 결정한다. 당시 방통위의 판단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

다. 40MHz 폭을 통신에 할당하고 나머지는 추후 할당을 검토하겠다는 전제를 깔긴 했으나, 20MHz 폭을 해당 주파수 상하위에 위치시킨 것은 사실상 전체 대역을 통신에 주겠다고 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전파의 간섭을 고려하면 40MHz 폭 주변의 보호대역이 필요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기술적인 면을 감안하면 ‘통째로 40MHz 폭을 할당하는 것과 ‘상하위로 나뉘서’ 할당하는 것은 천지차이다.

이후 최시중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종료된 일주일 후 자신의 비리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렬히’ 사퇴한다. 그리고 약 두 달후, 방통위는 해당 주파수의 통신 할당을 국제적인 흐름으로 포장하기 위해 WRC-12 외곽 보도자료 파문을 일으키며 무리수를 연발한다.

이후 정권이 바뀌며 미래창조과학부가 탄생했다. 미래부는 주파수 공동 연구반을 운용하긴 했지만, 주파수 수급에 있어 기본적으로 구 방통위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미래부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 할당 로드맵을 포함한 구 방통위의 모바일 공개토 플랜 1.0을 더욱 가다듬어 2.0 버전을 확정했고, 여전히 700MHz 대역 주파수 상하위 40MHz 폭을 통신에 할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서 방송쪽 인사들이 해당 주파수 상하위 40MHz 폭 통신 할당은 방통위원장 고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점을 피력했으나 모조리 무시당했다. 해당 주파수를 둘러싼 논리전쟁은 더욱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잔뜩 낮은 자세로) 지상파가 야심차게 발파한 국민행복 700 플랜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

는 분위기다.

이런 와중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국가 재난망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미래부는 전권을 부여받아 10년 넘게 표류하던 국가 재난망 구축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국가 재난망을 700MHz 대역 주파수에서 구축하자는 논의가 나오며 상황은 고차 방정식이 되어 갔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700MHz 대역 주파수의 상하위 40MHz 폭을 인정한 상황에서 국가 재난망을 포함시키면 전파간섭 및 보호대역 설정을 제외하면 해당 주파수는 ‘국가 재난망+통신’의 대역으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모바일 공개토 플랜 2.0에 포함된 700MHz 대역 주파수 상하위 통신 할당을 전면 무효화하고 해당 대역을 ‘방송+국가 재난망’으로 삼자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현재 미래부는 LTE 중심의 통합 안전공공망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여러 가지 논의를 수렴하고 있다.

통신의 해당 주파수 글로벌 활용설이 허구로 드러나고, 무제한 요금제 및 모바일 IPTV 확충으로 본 통신의 주파수 수급이 예상외로 원활하다는 전제를 감안했을 때 700MHz 대역 주파수의 주인은 방송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재난망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가는 몇 가지 대안이 있다. 서두에서 설명했지만, 우선 모바일 공개토 플랜 2.0을 수정해 700MHz 대역 주파수의 상하위 통신 할당을 폐기하고 해당 대역을 ‘방송+국가 재난망’으로

방송-통신-재난망 조합을 찾아라

뭉는 방법이다. 어차피 해당 주파수의 통신 할당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의외로 간단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다. 통신의 로비력 및 구 정부부의 ‘라이프’와 같은 정무적인 판단만 배제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제4기통사에 도전한 KMI가 국가 재난망을 맡는 방법도 있다. 이럴 경우 700MHz 대역 주파수가 아니라 2.5GHz 대역 주파수가 국가 재난망으로 활용될 것이다. 해당 주파수 대역은 미래부가 와이브로와 LTE-TDD 중 하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으며, KMI는 LTE-TDD를 주력으로 삼는다고 한다. LTE-TDD와 호환이 잘되는 와이브로 대역인 2.3GHz 대역과 더불어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 다만 KMI가 국가 재난망 구축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있느냐는 변수가 될 것이다. 물론 900MHz 대역 활용도 논의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최근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상파에 700MHz 대역 주파수를 주자고 했던 전임 양문석 상임위원과는 생각이 다르다”며 “해당 대역은 국가 재난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일이 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사실상 김 상임위원은 통신에 40MHz 폭을 할당한 상황에서 국가 재난망을 구축하자는 뜻으로 보인다. 방송을 배제하자는 뜻이다.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기관인’ 방통위, 그것도 ‘야당’ 상임위원의 인식이라고 보기에는 처참한 수준이다. 국가 재난망을 살리는 방향에서 공공성의 가치를 우선에 두는 가치판단이 절실하다.

최진홍 rgdsz2@kobeta.com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 방송기술과의 만남

민 태 천 미디어상식연대 위원

2000년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말했다. ‘소유의 시대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의 말은 고전주의 정치학자들의 이론을 부정하며 자본주의 3.0 시대를 준비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읽혔다. 하지만 그가 패낸 ‘소유의 종말’이 말하는 것은 그 보다 더욱 고차원적인 프레임이었다. 온 세상을 구성하는 확고한 혁신, 지금까지의 역사시대를 관통한 완벽한 트리거(trigger)의 의미로 제레미 레프킨은 시대의 혁명을 노래한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로 2008년을 기점으로 미국에는 ‘접속’의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오래된 한국영화의 제목인 접속(access)이 일차원적인 ‘접촉’에서 탈피해 새로운 의미의 가능성을 부여받은 셈이다. 여기서 공유경제의 개념이 탄생했다. 로렌스 레식 교수는 자신의 저서 ‘리믹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와 재화를 공유하는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을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고 명명했다. 이는 필연적으로 IT와 SNS, 그 외 광의의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제레미 리프킨이 다들은 시대의 혁명이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의 공유경제로 수렴된 2010년대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공유경제가 전통적인 산업군을 파괴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통적인 산업군을 언제가 사라져야 할 모래성이라고 여긴다면 이를 발전적인 해체로 받아들이 일 여지가 있으나, 그러기에는 지금의 출혈이 너무 크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인 집카(Zipcar)와, 최근 프랑스와 독일, 영국에서 대대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킨 ‘우버(UBER)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공유경제에 발판을 둔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전통적인 산업과의 치열한 투쟁을 거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법규상의 문제도 있다. 법은 기본적으로 보존과 권리의 행사, 그리고 의무의 행태로 정의된다. 이런 관점에서 전통적인 산업군의 종말을 한 사업의 종말에 방점을 찍으면 곤란하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경계의 부근에서 우리는 기술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공유경제에 입각한 새로운 신성장 기술들이 붓물을 이

루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술의 향상과 발전에 따른 현명하고 지속가능한 화합과 발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특정 사업군의 공유경제 개념을 무작정 지지하고 받아들이기보다, 기술적인 간극을 먼저 메워가는 형식으로 전통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빨아들이는 식이다. 마치 프랜차이즈 업체가 탄생하며 기존 골목상권의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식이다. 기술은 이러한 불균등한 자본의 차이까지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자격과 또 능력이 있다.

그 어떤 첨단산업에서 방송기술 분야는 공유경제가 가장 활발하게 통용되는 분야다. 유튜브를 통한 콘텐츠의 집단 쉐어는, 불특정한 단체나 이익의 독점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OTT 발전은 양방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궁극적으로 콘텐츠를 쉐어하고 다듬는 분야까지 발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송의 콘텐츠는 누군가 송출하고, 그 송출한 콘텐츠를 정해진 이용자가 받아쓰는 형태로 소비되어 왔

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비극을 방송에 적용하면 자본의 논리에 따라 콘텐츠의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방송기술은 지금 당장 실시되어야 하는 우선순위다.

공유경제의 흐름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방송은 누군가의 독점이 아니게 되었고, 이를 효과적으로 창출하는 끝없는 우물의 근저에는 방송기술의 발전이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방송은 기술로 흐르고 있고, 방송은 공유경제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실험을 강요당하고 있다. 단순한 기술발전에 따른 시청자 편익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이제의 공유경제의 새로운 모르모트(marmotte)가 기꺼이 되어야 한다.

다만 급격한 방송기술의 발전이 웨어러블 IT를 망라하는 범 ICT 분야의 융합파도에 휘말려서는 힘들어진다. 융합의 근간에는 방송기술의 ICT를 제한하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핵심을 잘 파악한다면 융합과 ICT의 역학관계에서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방송기술의 공유경제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방심위의 의지, 누구에게 유리할까?

천 장 극 언론비전광장 부대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의 문창극 검증보도를 두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사건이지만, 이는 이 땅의 보수세력이 뽕뽕몽처 제2의 역사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본다. RTV의 다큐멘터리인 ‘백년전쟁’으로 촉발된 보수와 진보의 다툼은 이제 KBS의 문창극 검증보도로 이어지며 치열하게 전쟁할 것으로 보인다.

KBS의 검증보도를 심의하는 방심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지점은 ‘자신들의 경정이 사회적인, 광의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와 기술적인 부분, 즉 ‘KBS의 보도가 어떻게 편집되었는가’에서 갈릴 것이다. 어차피 결론이 나와있는 상황에서 방심위는 이 두가지 ‘수단’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할 것이다. 다만 방심위의 결정을 사회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수단에 있어, 지금까지의 방심위가 논란을 비껴가며 무시했던 사례를 보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관건은 두 번째다. KBS의 악의적인 보도라고 지적되는 부분을 교묘하게 잡아내는 것. 여기에 방심위가 촉발한, 보수와 진보의 제2의 역사전쟁 승패가 갈릴 것이다.

사실 이러한 수단적 방법은 국무총리실이나 기타 MBC와 같은 방송사도 참여했었다. 하지만 막상 문창극 씨의 교회 강연 영상을 모두 보더라도 전체 맥락을 따라간다는 전제를 감안해도 상식적인 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평이 대다수다. 이 지점에서 문창극 씨는 해당 발언이 교회에서 한 특수한 상황이라고 변명했으나, 만약 교회에서 식민사관에 입각한 발언이 널리 통용된다면 이도 보통일이 아니다. 보수와 진보를 관통하는 문창극 씨 반대는, 아마 이러한 오해와 편견이 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관념을 심어주지 못하도록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로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한 이유로 이번 방심위의 KBS 제재 가능성은 사실상 보수세력에게 독이 든 성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독이 든 성배라고 포기한 이유는, 지지자들의 응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을 계속할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특히 문창극 씨의 기독교 역사관은 근대 기독교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지배할 때의 논리에서 기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칫하면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 대한민국

의 근간을 흔들 여지가 있다. 야만적인 아시아인을 칼과 총, 그리고 기독교로 교화한다는 유럽 식민주의자들은 이를 ‘백인의 의무(The White Man’s Burden)’로 여긴 바 있다. 결국 문창극 씨는 초창기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될 당시, 우리 민족을 상당히 미개한 수준으로 보고 포교를 시작한 식민주의자-기독교의 콜라보레이션을 그대로 차용한 셈이다.

만약 보수가 식민주의자-기독교의 콜라보레이션에서 파생된 저열한 ‘백인 우월주의’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측면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시킨다는 사회적 합의가 더욱 속도를 낸다면, 이는 보수 전체의 위협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를 제거한다고 해도, 보수는 ‘오해다’라는 근본주의적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KBS 보도를 심의하는 것이며, 그래서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다.

이제 명확하다. 결국 보수는, 자신들의 속뜻을 들이지 않은채 단순한 돌출상황에 따른 위기에서 이를 무마하려는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바로 KBS의 제재를

뒤통잡하는 일차적인 단계가 될 것이다. 이 땅의 건전하고 훌륭한 보수가 여전히 많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는 모두가 수궁하고 이해할 것이다. 문창극 검증보도 제재는 곧,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의 경계를 명확하게 만들어 줄 일종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방심위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방심위의 결정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다양한 가치의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파생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방심위의 고유한 업무는 방송 환경이 생태계를 올바르게 가꾸고 발전시키는 것이지, 절대 특정 정치세력의 ‘세 불리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금의 방심위는 상당한 정치세력화를 이루고 말았다. 이러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적폐를 철pe하고 부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방심위의 의지가 누구에게 유리할까를 묻고 답하는 일보다, 방송 환경의 올바른 구축이 먼저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정치적인 방심위의 판단은 결국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의 경계를 충돌시켜 상당한 소모전을 야기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 R O A D C A S T I N G & T E C H N O L O G 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월간 방송과기술 구독 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 안내문 발송
- KOB(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무료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방법

- 1년간 8만원 / 6개월 5만원
- 계좌 : 씨티은행 187-00275-245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02-3219-5635 / 팩스 : 02-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Next!!

KOBASHOW 2015



25회 국제방송 · 음향 · 조명기기전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2015.05.19-22
COEX, SEOULwww.kobashow.com

주 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이앤엑스

후 원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방송통신위원회 · KBS · MBC · SBS · EBS · OBS · 한국음향학회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별후원 CBS · 아리랑국제방송 · tbs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

ufi
Approved
Event

산업통상자원부